

‘독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3개 시·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갈수록 독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단독 발령에서 수도권 공동발령으로 변경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도 다양해졌다.

기준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령기준을 충족할 때 시·도별로 각각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그러나 수도권 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30일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중 2개 시·도 이상에서 발령기준 충족시 수도권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도 다양화했다. 개정된 요건에는 수도권 중 2곳 이상에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0시~오후 4시) 50 $\mu\text{g}/\text{m}^3$ 초과하거나 다음날 50 $\mu\text{g}/\text{m}^3$ 초과가 예보될 경우 내려진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경보권역 1곳 이상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거나 다음날 50 $\mu\text{g}/\text{m}^3$ 초과 예보 시에도 내려진다. 다음날 75 $\mu\text{g}/\text{m}^3$ 초과가 예보됐을때도 발령된다.

개정전에는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0~오후 4시) 50 $\mu\text{g}/\text{m}^3$ 초과하거나 다음날 50 $\mu\text{g}/\text{m}^3$ 초과가 예보될 경우에만 내려졌다.

서울시, 기준 2개→5개 확대...수도권 공동 발령 고농도 예측 시 공공부문 예비저감조치 가동해 토요일·공휴일에도 비상저감조치 신설·발령

시는 고농도 예측 시 공공부문의 선제적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모레(D+2)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내일(D+1)부터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의 작업단축·조정, 도로 물청소 대책 확대 등이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는 내일(D+1)과 모레(D+2) 예보가 모두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하거나 모레(D+2) 예보가 '매우나쁨'인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와 동일하게 2개 시·도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 공동으로 시행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부터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도 실시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변경된다.

이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

법이 시행되는 2월15일부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지난해 11월7일 서울에서 시행된 2.5t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수도권 차량의 감소율이 34.2%, 수도권 외 차량의 감소율은 12.5%로 나타났다. 수도권 차량의 감소율이 높았다.

시는 지난 13일 최초로 토요일·공휴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기존에는 평일에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토요일·공휴일 비상저감조치가 신설됐다.

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 문자 발송하는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했다. 또 도로 흡입정소차 가동 확대, 대기배출사업장 작업단축, 자동차배출가스·공회전 단속을 시행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도 대기질이 개선될 때까지 중단했다. 휴일인 점을 감안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미칠 수 있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와 공회차량 운행제한은 미시행했다.

평균소득 무주택 서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 이용 가능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2000호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빌려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평균 수준 소득을 올리는 서민에게도 전월세보증금을 빌려주기 위해 각종 조건을 완화했다.

시는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지원대상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보유 자동차 현재가치는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로써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한달 별이 서울시 평균 수준인 무주택자가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약 500만원, 4

인·5인 가구는 약 584만원, 6인 이상 가구는 약 622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됐다. 자녀 유무가 우선순위에 고려(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가 가점기준으로 변경됐다.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 주택의 계약 방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인 주택까지만 지원된다.

보증금 지원과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인천교통공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배부

인천교통공사는 14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를 연속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맞춰,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해 출근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천호선 3개역(부평, 인천시청, 동춘)과 인천호선 3개역(가정, 주안, 남동구청)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예방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행사 참여자들은 인천도시철도 이용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고객감사 인사를 하며 1만여개의 마스크를 고객들에게 배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많은 시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자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공사에서도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차량부제 시행에 적극 참여하는 등 친환경 그린 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놀란 박원순, 관용 경유차→전기차로 바뀌



박원순 서울시장 전기차를 타고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미홀에서 열린 '서울별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2019년 신년인사회'에 도착해 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일정을 소화하며 타고 다니는 관용차를 경유차에서 국산 전기차로 바꿨다. 다만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할 때는 부득이 경유차를 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출퇴근과 각

종 행사 참석을 위해 H사 K전기차를 쓴다.

박 시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18일까지 경유차인 2012년식 K사 C기종을 탔는데 6년여만에 관용차를 교체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C기종은 디젤차량이고

미세먼지 심각성 인식 전기차 도입 기술 진보 충전거리 확보되자 교체

기는 하지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던 차량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친환경적인 차량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15년부터 관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려했지만 예산 부족과 충전기 부족 등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생산된 국산 전기차는 비교적 소형이라 시장 관용차로는 적합하지 않았던 점도 불발 이유 중 하나였다.

시 관계자는 "시장 차량은 운행이 많은데 2015년 당시 전기차는 1회 충전 후 운행가능거리가 짧았다"며 "시장 차량은 집무실 기능도 있고 수랭식도 타야 하고 시장이 활용하는 자료도 보관해야 해서 소형차를 쓰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국산 전기차 품질과 성능이 개량되면서 시장 관용차를 전기차로 바꾸게 됐다. 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1번 충전에 400km를 달리는 차량이 출시되자 시는 H사에 구매 문의를 했다. 전기차 구입 지원금 담당 부서 집행 예산 잔액을 긴급 확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2월17일 새 전기차가 시로 입고됐다.

관용차를 전기차로 바꾼 것은 박 시장이 처음은 아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윤정환 광주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전기차를 타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다만 모든 일정을 전기차로 소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직 부족한 탓이다. 박 시장은 수도권 밖으로 장거리 출장을 떠날 때는 부득이 기존 C기종 경유차를 쓴다.

시 관계자는 "19일부터 시장 전기차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기존에 타 온 승합차와 병행하는 단계"라며 "이후 장거리를 갈 때는 C기종을 쓴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전기차로 이동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